

“靑 비서실 개편, 정무적 기능 강화”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정치분야

“신문 강화” 라는 언론의 평가에 약간 안타까워 언론인 등용, 공공성 살릴 수 있어... 권언유착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근 비서실 개편과 관련 ‘신문(親文)강화’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8일 청와대 비서실 인사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3선 의원을 거쳤고, 강기정 의원(현 청와대 정부수석)도 마찬가지로 3선 의원을 거쳤다”며 “다음 총선을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줬다”고 전했다.

이어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 그렇게 바꾸지라”며 “정무적 기능 속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오래 있었고 산업정책도 밝고 산업계 인사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며 “그런 장점이 발휘될 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권언유착, 현 정부에 전혀 없다고

자부”

문 대통령은 언론인 출신 인사를 청와대로 등용한 것과 관련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청와대 신인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환 전 MBC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바로 오는 것이 괜찮다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권력에 대해 아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언론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로서도 청와대 내부에서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함묵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시민의 관점에서 비판 언론의 관점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언유착 강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그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인사에서 흠을 지적할 수 있겠다”며 “대통령 욕심은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 정신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한다면 양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김태우, 자신의 행위 놓고 시비... 수사로 가려질 것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있던 폭로와 관련 “개인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며 “김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하는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신재민, 좁은 세계 속에서 문제 있다고 판단...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

문 대통령은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발언을 열었다. 내부 폭로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종 권한자는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액을 끼친 바가 있다”며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신 전 사무관을 위해 답을 드리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통, 이런 것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을 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울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책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주변을 격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노동자들의 삶 개선, 최선의 노력 기울이는 중”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노동·사회분야

“불평등 해소 중요하나... 경제·고용 영향 살릴 필요 있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노사 지혜 모아야” 젠더 불평등에 “부끄러운 현실... 변화하는 사회 속 생기는 갈등”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동·사회현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노동계가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위해 양측이 지혜를 모아달라고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과 관련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성의 고취와 진출,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20대 남녀 간에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격차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젠더 갈등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노동정책 후퇴?...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동권 신장을 위한 I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조건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이어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호소했다.

◇ 광주형 일자리, 노사 머리 맞대야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노사에 타협을 촉구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하는지 아는가. 아마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며 “그 뒤에 줄곧 외국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기는 했어도 한국에 생산라인 새롭게 만든 것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전기차, 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려가는 게 우리 차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생산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노사 간에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젠더 갈등 특별히 않아... 사회 성숙한 방향 나아가

문 대통령은 최근 20대 남녀의 지지율 격차가 20%p 가까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남녀 간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 (젠더) 갈등 때문에 지지도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고 특별한 갈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난민, 소수자 갈등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며 “모든 성들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활동, 사회활동,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20대 남녀의 지지도에서 차이가 있다면 ‘희망적 사회’라고 있으나, 희망을 못 주고 있는냐라는 데서 관점 차가 있을 거라고 본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대한체육회 개선 대책 수립할 것”

민주 홍영표 원내대표, 조재범 성폭행에 “체육계 병폐 심각 ‘세계 1위’에 윤리적 문제까지 물어버리는 환경이 원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체육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체육계 성폭행 고백이 다시 나와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백해준 선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체육계 병폐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구조적으로 ‘금메달을 따야 한다’, ‘세계 1위가 돼야 한다’는 지상 과제에 모든 도덕적·윤리적 문제까지 물어 버리는 환경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문제가 돼 권한을 민간단체, 특히 대한체육회에 이관했다”며 “사실 상 대한체육회가 빙상협회와 빙혼해 선수들 문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대한체육회 자체가 윤리적 문제까지 어떻게 개혁, 임원진의 책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추궁해야 한다”고 목적을 높였다. 또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 선수 성폭행 문제를 넘어 대한체육회 문제까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박용근 도의원, 전북 양봉산업 육성 지원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군)이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5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 보급하도록 하였다”이다.

또한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봉농업인, 소비자, 관

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봉산물의 생산, 유통지원사업, 양봉산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꿀벌육성 및 밀원식물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 도, 시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다.

박용근 의원은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 프롤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최근 밀원수의 감소와 병해충, 생산비 증가로 양봉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양봉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고용지표 부진 해결 새해 정부의 가장 큰 과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경제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개월 일기 동안 고용지표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점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가는 건 궁정지표이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못 늘었기 때문에 국민 체감고용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 작년과 다르게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 해결책으로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

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활력도 강조하며 “지역경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중앙정부가 지역에 사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타를 거치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진성 기자